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연구과제 소개

구분	과제명	과제책임
협동 과제	국토경관 향상을 위한 농촌 경관관리체계 개선 연구(2)	심경미
수시 과제	녹색건축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제도 개선 연구: 건축규제 및 기부채납 기준을 중심으로	김승남
	기업형 임대주택 주거서비스 활성화 방안	서수정
	지구단위계획 변경 제도 합리화 방안: 경미한 사항 변경 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박성남
	건축협정제도 개선을 위한 건축법령 정비방안 연구	여혜진
	도시재생사업 청년층 참여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	윤주선
	소규모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 연구	김은희
	건축물의 범죄예방 관련 법령 개선방안 연구: 건축법 및 하위법령을 중심으로	조영진

협동과제

국토경관 향상을 위한
농촌 경관관리체계 개선 연구(2)

농촌의 지역적 특성을 보전하고 계승하기 위해 농촌 경관 관리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 하에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농촌 경관을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부처별 정책의 일관성 부재, 농촌 경관관리제도 간 연계성 부족, 농촌경관 관리수단의 실효성 부재 등으로 인해 농촌 경관관리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 인식을 토대로 2015년에 ‘국토경관 향상을 위한 농촌 경관관리체계 개선 연구(1)’를 수행하였다. 2015년에 수행한 1차연도 연구에서는 농촌 경관관리체계의 법·제도적 문제점을 파악하고, 일본·미국·독일 등 해외 농촌 경관관리체계로부터의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현행 농촌 경관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방향을 설정하였다. 1차연도 연구를 통해 국민·지역 주민·전문가·행정담당자 등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일관된 농촌경관 정책이 필요하며, 농촌 경관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법·제도 정비와 더불어 농촌 경관을 담당하는 여러 행정조직 간 협력적 운영이 중요하다는 점을 연구결과로 도출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1차연도 연구결과를 토대로,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농촌 경관관리의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농촌 경관관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조직의 운영체계를 분석하며, 협력적 운영 관련 국내외 선진사례 검토를 토대로 농촌 경관관리를 위한 행정의 협력적 운영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농촌 경관 관련 정책 및 행정조직의 협력적 운영체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법·제도, 인력, 예산 등에 의해 작동되는 농촌 경관관리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행정 분야의 전문 연구기관인 행정연구원과 협동연구를 진행하여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정책 및 제도 개선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국토 면적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농촌에 대한 체계적인 경관관리 방안을 제안함

으로써 궁극적으로 국토경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심경미

수시과제

① 녹색건축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제도 개선 연구: 건축규제 및 기부채납 기준을 중심으로

녹색건축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 효과는 미미하며, 특히 초기 투자비용 경감을 위한 인센티브 수단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인센티브제도의 법률적 근거와 한계를 살펴보고 건축기준 완화와 주택사업에 대한 기부채납 기준을 중심으로 그 개선 방안을 제안한다.

우선 녹색건축 인센티브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강화하기 위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녹색건축법) 시행령 제11조 개정으로 인센티브의 지원 시점과 대상을 명확히 하고, 녹색건축법 제15조의 조항 신설을 통해 그 린리모델링에 대한 건축기준 완화 근거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불합리하고 실효성이 미미하던 건축기준 완화 인센티브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녹색건축법 시행령 규칙 및 행정규칙(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의 통합적 개정이 요구된다. 녹색건축법에서는 건축기준 최대 완화 비율을 상향하고, 시행령에서는 건축기준 완화 기준을 행정규칙이 아닌 시행규칙 수준에서 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며, 시행규칙에서는 별도의 조례 제정 절차 없이 적용할 수 있는 최대 완화폭을 제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녹색건축의 초기 투자비용 경감을 위한 대책으로, 현행 '주택사업 관련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 기준'에 녹색건축에 대한 기반시설 기부채납 특례 조항을 도입하여 관련 인증등급에 따라 기부채납 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녹색건축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김승남

② 기업형 임대주택 주거서비스 활성화 방안

현 주택시장은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고, 전세난과 월세 전환 등 주거난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30~40대 중산층 임차 가구를 중심으로 경제적으로 지불가능한(affordable) 장기임대주택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에서 주거안정성이 높은 등록임대주택 재고는 2013년 기준 21% 수준에 불과하다. 이러한 부동산 시장의 수요 변화에 따라 정부에서는 2015년에 중산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월세시대로의 전환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민간임대주택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뉴스테이'라는 브랜드로 시작한 기업형 임대주택은 입주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기본적인 유지 관리 서비스와 함께 주민 맞춤형 주거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서비스 유형의 패키지화, 비용 부담의 차등화, 선택 옵션 제시 등 소비자가 주거서비스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사업자와 관리 주체가 특화 전략을 제시하도록 유도하였고, 이를 위해 LH사업자 공모에도 주거서비스 분야를 별도로 평가하고 있다. 2016년부터는 선진화된 주거서비스 모델 개발을 목표로 LH사업자 공모에 주거서비스 평가 배점을 총 1,000점 중 40점에서 60점으로 상향 조정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정책적으로 기업형 임대주택의 주거서비스 특화 전략을 중시하고 있음에도 주거서비스에 대한 개념과 유형, 서비스 대상이 불분명하여 사업자 공모 당시 제안한 주거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공동주택 공급 경험과 임대관리 경험이 있는 사업 주체와 그렇지 않은 사업자 간의 주거서비스 제공 및 유지 관리 수준의 편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예상된다. 특히 소규모 단지의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의무적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복리시설만 설치하고 운영관리 지원이 부재할 경우 거주자들의 생활 지원을 보장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는 기업형 임대주택의 주거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단지 간 서비스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임대주택 사업자가 양질의 주거서비스를 공급하도록 유도할 수 있

는 주거서비스 인증평가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주거서비스 운영을 위한 입주자 중심의 모니터링 체계를 인증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뉴스테이 주거서비스 인증평가 방안은 임대주택 관리와 주거서비스 산업을 연계하여 부동산 시장에서 양질의 주거서비스 산업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서수정

3 지구단위계획 변경 제도 합리화 방안: 경미한 사항 변경 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은 일정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 및 관리하기 위해 시장, 군수 등이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이다. 지구단위계획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미한 사항에 포함되는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인 경우에는 변경절차 이행에 소요되는 시간, 비용 등이 대폭 감소한다. 그러나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사실상 경미한 행위에 해당됨에도 법령에 규정된 경미한 변경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법령상에 규정하고 있는 변경 절차를 모두 이행하여야 하는 불합리한 일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 구역 내 사업자의 기업환경 개선 등을 위해 경미한 변경사항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경미한 변경사항의 규정 방식을 변경하는 등 지구단위계획 변경 제도에 대한 합리화 요구가 늘고 있다. 또한 기초 지자체 도시관리 특성을 반영한 구체적인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 운용수단 제시를 위한 방향 설정도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제도 운용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제도 개선 수요를 파악하여,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범위 및 규정 방식 대안 평가를 통해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지구단위계획 규제 합리화와 더불어 절차에 소모되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함으로써 경미한 변경 제도 운용 효과성을 증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해 본다.

박성남

4 건축협정제도 개선을 위한 건축법령 정비방안 연구

정부는 ‘도시 및 건축규제 혁신방안’(제2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2014.9.), ‘건축투자 활성화 방안’(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 2015.7.)을 통해 그간 아파트 공급 위주 정책에서 노후건축물 재건축 및 리모델링 정책으로 정책 지원의 무게중심을 전환하고 있다.

이러한 여건에서 건축협정제도는 2014년 1월 제도 시행 이후 세 차례 「건축법」을 개정하면서 주로 「건축법」 제77조의 13에 따른 건축기준 특례의 범위를 확대하여 왔으며, 올해 7월과 8월 시행되는 개정안을 통해서 건축협정구역의 건축물에 대해 「건축법」의 모든 기준을 통합적으로 적용하고, 건폐율과 용적률 등의 완화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이 같은 제도적 지원을 통해 필지단위 건축행위 여건이 불량한 노후 기성 시가지에서 주민 자율적 건축행위가 활성화되고, 새로운 건축시장 발굴을 통한 경제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한편 건축협정제도는 본래 개별 필지단위의 건축행위를 다루는 「건축법」을 바탕으로 하지만 여러 대지를 ‘하나의 대지로 간주’하여 건축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소규모 정비행위의 개념을 「건축법」에 도입한 것이 가장 큰 개념적 특징이다. 다시 말해 협정건축물은 여건에 따라서 건축물의 기능 및 구조적 독립성과 소유권의 독립적 행사 측면에서 공동개발의 속성을 갖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는 법령에서 명확한 범리로 드러나지 못하였으며, 지난 한 해 건축협정제도와 관련한 80여 개의 민원 중 대부분인 범위 해석과 관련된 민원에 단편적 대응에 그침에 따라,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또한 하위 법령이 미비하고 지방자치법규가 마련되지 않아서 지자체별로 제도의 운영 기준이 상이한 점도 제도의 조기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선결되어야 할 문제로 인식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전국의 건축협정 추진 실태를 파악하여 제도의 수요자인 지자체 건축사 주민의 관점에서 제도 운영의 문제점과 한계를 파악하고 수요자가 손쉽게 이해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건축법령 정비, 건축협정 심의 기준 및 절차 개선, 건축협정제도의 주요 용어에 대한 법령 해설 등 건축협정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주민이 자율적·지속적으로 건축협정을 추진하고, 지자체가 효율적으로 건축협정 관련 행정을 운영하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여혜진

5 도시재생사업 청년층 참여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

인구감소 시대의 도시관리 방식인 도시재생은 신규 생산을 통한 팽창적 공급보다 기존 생산의 재조합과 연계를 추구한다. 구도심에 축적된 사회문화적 자산을 융복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재창조함으로써 인구와 소비를 적재적소에 연결하는 것이 도시재생의 목표 중 하나이다.

성장기 도시에서는 물자의 대량 공급을 위해 분업화와 전문화에 최적화된 안정적 대규모 조직을 중점 육성하였다. 반면 관리기의 도시에서는 기존 생산의 효과적 연계와 재창조를 위해 작고 유동적인 소규모 그룹이 사업 주체로 활발히 작동한다. 문화·건축·도시·관광 산업·마케팅·경영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잦은 소통을 통해 융복합을 추진하고, 수시로 변하는 지역 여건과 주민 요구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이 빠른 작은 조직이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도시재생은 단기 소규모 프로젝트들이 전국 각지에서 다발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조직 간 융복합이 연속적이지 않다. 각 프로젝트의 성격에 맞게 각 분야의 팀끼리 결합과 분리가 수시로 발생한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야 간 결합과 분리에 용이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도 소규모 그룹이 도시재생에 유리할 수밖에 없다. 분야의 벽을 뛰어넘는 수평적 인적 네트워크와 유연한 조직 운영에 강점을 보이는 소규모 청년그룹들이 성공한 지역의 도시재생에서 자주 나타나는 이유이다.

본 연구는 도시재생 현장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국내외 청년그룹의 사례를 조사하고, 이들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는 지원 방안과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지역의 청년 인재 유출을 방지하고 고부가가치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윤주선

6 소규모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 연구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공동주택 단지 수는 총 1만 4,553단지이고, 이 중 법정 리모델링이 가능한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 단지 수는 7,637단지로 전체의 52.5%에 이른다. 또한 15년 경과 공동주택은 매년 30만 호씩 증가하는 추세이다.

본 연구는 국내 노후공동주택 증가로 인한 국민 주거복지 저하 및 안전 위협, 지역 쇠퇴 및 경관 저해 등 사회적 문제와 더불어 주택건설시장 경기 침체 등 다각적인 문제 인식과 개선 필요성에서부터 출발한다.

특히 「주택법」에서 명시한 주택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공동주택, 즉 300가구 미만의 아파트나 연립·다세대주택의 경우 건축물 노후도가 가중되고 있으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관련 법규정은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현실성 있는 리모델링사업 계획 및 실행이 어렵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R&D 연구를 통해 저비용·고효율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사업모델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동일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적용 가능한 제도적 대안 마련을 위해 추진되었다.

이러한 취지에서 본 연구는 소규모 공동주택 관련 정책 및 법·제도, 실제 리모델링 사업추진 사례 분석 등을 통해 소규모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요구되는 정책적 현안을 도출하고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과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특히 대상 시설의 물리적·환경적 여건과 더불어 거주자의 주거 실태를 고려한 현실적인 리모델링 목표와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아울러 공공과 민간의 역할 구분에 따른 전략적 대응으로, 관련 법 제도 정비(안)를 제시하고자 한다.

김은희

**7 건축물의 범죄예방 관련 법령 개선방안 연구:
건축법 및 하위법령을 중심으로**

국내 범죄예방 환경조성 관련 법·제도는 1992년 건설교통부(현재 국토교통부)가 ‘방범설계를 위한 지침’을 전국 설계사무소에 배포한 것을 시작으로 범죄예방 환경조성을 제도화하기 위한 노력이 펼쳐졌다. 이후 2005년 경찰청이 범죄예방 원리에 따른 건축 및 공간유형별 시설물별 기준 적용에 관한 내용의 ‘범죄예방을 위한 설계지침’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국토교통부, 행정자치부, 법무부 등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범죄예방 환경조성을 위한 정책 수립을 실질적으로 추진하였다.

국내에서 범죄예방 환경조성 관련 법·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한 것은 경찰청이 국토교통부에 범죄예방을 고려한 법률 개정을 요구한 2010년부터 볼 수 있다. 이후 ‘지속가능한 신도시 계획기준’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다수의 법령이 개정을 통하여 범죄예방 관련 내용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내용이 상징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실제 효과는 미흡하였다.

2014년 5월, 「건축법」의 개정(제53조의 2 건축물의 범죄예방)과 동년 11월 「건축법 시행령」 개정(제61조의 3 건축물의 범죄예방)으로 인해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건축물의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하도록 의무화되었으며, 2015년 4월 1일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기존에 도입된 다른 법·제도에 비해 매우 실효적인 조치로, 건축의 설계단계에서부터 범죄예방 기준을 적용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지난 1년간 「건축법」의 범죄예방 기준의 시행으로 의무대상 건축물의 경우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서 설계단계에서 해당 기준을 준용하고 있어 범죄로부터 보다 안전한 건축물이 조성되고 있다. 그러나 해당 기준이 정성적인 항목이 많아 허가권자마다 해석이 분분하고, 건축물 창호의 침입 방어성능 기준의 경우 창호업체의 인식부족과 성능인증 제도의 미비 등으로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기준의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범죄위험이 높은 소규모 공동주택이 의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범죄위험평가와 범죄예방 우수 디자인 인센티브 등에 대한 조항이 없어 보다 안

전한 건축물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건축법」 범죄예방 기준의 시행 1년간 접수된 관원과 민원을 분석하고, 국내외 건축물 범죄예방 관련 제도 및 사례를 조사하며,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고시 등 일련의 범죄예방 관련 체계를 정리하고, 범죄예방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하여 효율적인 범죄예방을 위한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고시 등의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건축물 범죄예방과 관련한 정책 실무자들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관련 민원 및 관원 따위 건축분쟁을 최소화하는 등 효과적인 건축물 범죄예방 정책 추진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조영진

2016 녹색건축 국제세미나 개최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5월 27일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와 공동으로 '녹색건축기술로 여는 지속가능한 삶'을 주제로 2016 녹색건축 국제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국제세미나는 지구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재인식하고, 자연과 인간의 상호관계를 고려하는 건축 및 도시공간 가치에 대해 고찰하고자 마련되었다. 국내외 유수의 연구자들이 참석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두 편의 기조강연, 세 편의 주제발표, 전체토론을 통해 녹색건축 정책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였다.

먼저 고주석 명예교수(네덜란드 와게닝겐대학교)가 'Ecological Design, Why is it not well accepted and what can we do about it?'이라는 제목의 기조강연에서 국내 생태 디자인의 경향성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두 번째 기조강연자 이연숙 교수(연세대학교 실내건축학과)는 '저성장시대 지속가능 삶의 해법: 녹색건축기반 평생 셀프케어 미래주택'을 통해 저성장·고령화 등 사회 변화나 현대사회의 생태적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주거모델로서 생애셀프케어주택을 제시하고, 영월 주거복지지원주택 사례를 소개하였다.



기조강연 이후 주제발표가 이어졌으며, 산티아고 포라스 알바레스(Santiago Porras Alvarez) 교수(고려대학교 건축학과)가 'Energy and Emissions: What Next?'라는 제목으로 발표하였다. 알바레스 교수는 EU의 건축물 에너지 효율과 CO₂ 배출량 기준에 부합하도록 계획된 스페인 도시의 사례를 소개하고, 도심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과 탄소배출 목표 달성을 위한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이명주 교수(명지대학교 건축학부)는 '제로에너지주택 활성화를 위한 최적화 모델 개발 및 실증단지 구축'에 대해 발표하였으며, 국내외의 녹색건축 관련 정책 동향과 국내 제로에너지 실증단지 사례를 중심으로 구축 과정 등을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알반 마니지(Alban Mannisi) 교수(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가 'Instable Sustainable. Environmental Political Philosophy of the Post-Sustainable Development Era' 발표를 통해 "미래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서는 전문가뿐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이응직 교수(세명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좌장으로 전체토론을 통해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 갔으며, 기조강연과 주제발표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도 진행되었다.

이번 세미나에는 녹색건축 관련 전문가들과 관련 전공 학생들이 참석하여 의견을 공유하였으며, 녹색건축 정책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뜻깊은 장이 되었다.

백혜인

2016
제1차 auri
건축도시포럼
개최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함께 5월 2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 4층 국제회의장에서 2016 제1차 auri 건축도시포럼을 열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를 어떻게 특화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이번 포럼은 국립박물관단지 마스터플랜 국제공모에 맞춰 시민 및 전문가들과 함께 국립박물관단지의 특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마련되었다.

행사는 이충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의 개회사에 이어 김대의 건축도시공간연구소장의 환영사로 그 문을 열었다.

주제발표 1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가치 및 미래비전’을 주제로 한 한창섭 단장(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공건축추진단)의 발표로 진행되었다. 한 단장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개요와 공공건축물·교량·공동주택 등을 대상으로 한 도시특화방안에 대하여 소개하며 “국립박물관단지 조성에는 개방성·다양성·공유성·확장성 등이 담겨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이어진 주제발표 2에서는 ‘쉬운 박물관을 위한 이야기’를 주제로 한 인문학적 접근에 대한 발표가 진행되었다. 문정목 교수(상명대학교)는 다양한 국내 외 박물관 사례들을 보여주면서 “전시 콘텐츠 및 매체, 사람 중심의 ‘쉬운’ 박물관 공간으로 계획되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마지막 주제발표 3에서는 ‘국립박물관단지 조성 특화 방안’을 주제로 국립박물관단지 마스터플랜 국제공모 전문위원인 신춘규 대표(씨이에스 건축사사무소)의 발표가 이어졌다. 신 대표는 국제적 수준의 관람편의 도모, 박물관 운영 효율성 증대, 국가 상징성 및 정체성 확보와 함께 세종시의 문화 인프라 요소를 연계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선정하여 국립박물관단지를 특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을 전하였다.

주제발표 후에는 운영태 교수(경희대학교)를 좌장으로 3명의 발표자를 비롯하여 김근호 과장(문화체육관광부), 김상호 실장(건축도시공간연구소), 정재희 교수(홍익대학교) 등 7명의 전문가가 총평과 토론을 진행하였다. 이 자리에서 세종시의 주변 시설과 연계되는 지속가능한 박물관단지로 조성해야 한다고 의견이 모아졌다.

행정중심복합도시 박물관단지에 관심 있는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업계, 시민 등 모두 150여 명이 참여한 이날 포럼은 국민 모두가 자부심을 느낄 만한 수준의 대표 브랜드로 국립박물관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정소윤



2016
auri
국가한옥센터
제1차
한옥포럼
개최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한옥센터는 6월 3일 명동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2016 제1차 한옥포럼을 열었다. 한옥포럼은 2011년부터 개최해 온 행사로, 한옥에 관심 있는 모든 이들을 대상으로 한옥정책과 한옥문화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된 토론의 장이다.

‘한옥마을 이야기’를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자연스럽게 형성된 전통 한옥마을과 달리 도시계획이나 「건축법」, 부동산 가치와 낯선 공동체 등 많은 미해결 과제를 안고 있는 21세기 한옥마을 조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마련되었다.

이번 행사에서는 세 편의 주제발표와 토론을 통하여 최근에 조성된 한옥마을의 사례를 살펴보고, 한옥마을의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첫 번째 발제자인 김형우 명예교수(홍익대학교 건축공학부)는 ‘서울 은평한옥마을 이야기’라는 주제로, 북한산 아래 새롭게 건설된 한옥마을의 조성과정 속에서 맞닥뜨린 문제점과 해결방법, 한옥심의회와 관련한 개선 사항 등을 들려주었다.

이어 박창희 대표(브리드건축사사무소)가 ‘인천 송도한옥마을 이야기’를 주제로, 신도시에 들어선 한옥마을의 초기 계획과 한옥호텔로 조성되기까지의 과정 등을 통해 향후 한옥마을 계획 시 사업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신치후 부연구위원(건축도시공간연구소)이 ‘한옥마을 계획 가이드라인의 제정 목적 및 주요 내용’의 발표를 통해 한옥마을로서의 특성을 갖추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공간구조·생태환경·공공공간 등 다양한 측면에서 알기 쉽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제발표에 후에는 전체 토론이 이어졌다. 전봉희 교수(서울대학교 건축학과)를 좌장으로 김용미 대표(금성건축사사무소), 유나경 소장(PMA 도시환경연구소), 이강민 센터장(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한옥센터), 복상규 사무관(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과 발제자들이 토론에 참여하여 한옥마을 계획 시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에 의견을 같이하였다. 또한 다양한 한옥마을 유형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3차원의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이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과 같은 상세한 계획이나 지침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였다.

이번 포럼은 현대에 새롭게 지어지는 한옥마을이 어떠한 방향성을 가져야 하는지, 한옥으로서의 품격과 현대적 요구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다.

이민경





제4차 건축도시 정책연구네트워크 개최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지난 4월 7일과 8일 양일간 부산광역시에서 12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발전연구원*과 ‘제2차 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제4차 건축도시정책연구네트워크 행사를 열었다.

‘건축도시정책연구네트워크’는 국가의 건축도시 정책을 발굴하고, 관련 제도의 시행과 정착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지역발전연구원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건축도시정책연구의 중심점 역할을 수행하고자 매년 1~2회 정기적으로 여는 행사이다.

제4차 건축도시정책연구네트워크는 「건축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처음으로 수립된 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성과 점검과 함께 최근 새롭게 수립된 제2차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지역 단위에서의 광역건축기본계획이 보다 실천력을 갖기 위해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논의하고자 마련된 전문가 워크숍이다.

행사는 ‘건축정책의 성과와 제2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을 주제로 한 김상호 선임연구위원(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발제를 시작으로 진행되었다. 건축정책 기본계획 전반을 살펴본 후 이어진 발제에서는 남지현 연구위원(경기연구원)이 ‘경기도 광역 건축기본계획의 성과와 발전방안’을 주제로, 변혜선 연구위원(충북발전연구원)은 ‘충북 건축기본계획 수립 사례’를 주제로 발제하였다.

토론에서는 지역건축정책기본계획이 당초 정책 취지에 부합되고, 계획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선되어야 할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지역건축정책기본계획이 지역 현안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부족한 채 수립되는 문제 외에도 세부 실천사업별 예산 확보와 연계되지 못하는 문제와 지역시·군별 정책을 실행하는 데 구체성이 다소 부족하다는 등의 한계점이 지적되었다. 국가와 지역건축계획을 함께 수립하여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계획 실행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이 모아지기도 하였다.

이번 행사는 지역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각 지역발전연구원의 전문가들과 함께 지역건축기본계획의 성과 및 한계를 살펴보고, 계획의 실효성 확보 방안을 논의하였다는 데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앞으로도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건축도시정책연구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지역발전연구원과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이어 나갈 계획이다.

백혜인

* 강원발전연구원, 경기연구원, 경남발전연구원, 대구·경북연구원, 대전발전연구원, 부산발전연구원, 수원시정연구원, 울산발전연구원, 광주·전남연구원, 전북연구원, 충남연구원, 충북발전연구원

2016
5월
녹색건축포럼
개최

건축도시공간연구소와 국토교통부가 주최·주관한 2016년 5월 녹색건축포럼이 5월 13일 세종컨벤션센터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녹색건축포럼은 국토교통부 지정 녹색건축센터 5개 기관*의 정보 및 의견 교류를 위하여 열리는 행사로, 관련 주제를 선정하여 발표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녹색건축포럼의 주제는 '건물에너지 데이터 활용 방안'이었으며, 조영진 센터장(건축도시공간연구소 녹색건축센터)의 사회로 주제발표와 질의응답을 진행하였다.

이번 녹색건축포럼의 주제는 '건물에너지 데이터 활용 방안'이었으며, 조영진 센터장(건축도시공간연구소 녹색건축센터)의 사회로 주제발표와 질의응답을 진행하였다.

이외 조상규 연구위원(건축도시공간연구소)이 '건물에너지 데이터 구축 및 활용 사례와 녹색건축 정책 성과분석 활용 방안'에 대해 발표하였다. 조위원은 미국 등 선진국의 건물에너지 데이터 구축과 활용 사례를 발표하고, 국내 녹색건축 정책 성과 분석 및 확산을 위해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세 번째로 이승언 선임위원(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건축물 에너지 성능 통합지원 시스템 개발 방안' 발표가 이어졌다. 이 위원은 현재 수행 중인 건축물 에너지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연구의 내용과 수행 전략, 개발 현황과 추진 계획을 소개하였다. 개발 중인 시스템은 건물에너지 사용량 정보와 사용자가 입력한 건물운영정보를 통해 유사 건물과 에너지 소요량을 비교·분석하여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하며, 자재 및 기술 등 녹색건축 정보도 제공하는 통합 시스템으로 자발적 건물 에너지 성능 개선 및 온실가스 감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뒤이어 김동한 책임연구원(국토연구원)의 '에너지 절감형 국토를 위한 건물에너지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 방안' 발표가 있었다. 건물에너지 데이터 시각화 및 분석 모형을 살펴본 이 발표에서는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도시 공간구조를 구현하기 위한 빅데이터 활용 방안을 함께 고민해 볼 수 있었다.

마지막 주제발표는 '에너지 사용량 데이터를 활용한 서울 강동구청 리트로핏 실증 사업'이라는 제목으로 이승복 교수(연세대학교 친환경건축연구소)가 맡아 주었다. 이 교수는 강동구청(현 강동경찰서) 공공건축물 리트로핏 실증사업의 1차연도 사업 과정에서 건물에너지 진단과 데이터 분석으로 최적의 에너지 절감안을 도출하는 과정을 설명하였다.

이번 포럼은 데이터 구축 범위 확장(이용 행태 정보, 에너지 사용 용도 등)과 정보 구축을 통한 건물 이용 행태 개선 및 자발적 성능 개선 유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출 필요성에 공감하는 시간이 되었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앞으로도 녹색건축 조성 정책 마련과 추진을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 및 관련자들과 긴밀한 논의를 이어 나갈 예정이다.

김신성



* 한국감정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16
제2차, 제3차
지식강연회
개최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4월 15일과 5월 20일 연구소 중회의실에서 2016년 제2, 3차 지식강연회를 열었다.

지식강연회는 연구소 내 연구원들에게 다양한 지식 함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전문가 초청 강연회이다.

제2차 지식강연회에서는 박무찬 실장(간삼건축사사무소 마스터플랜팀)의 '공간정보를 활용한 주거정책 디자인 프로세스' 주제발표가 있었다. 이 자리에서 박 실장은 공간정보를 활용한 건축 및 도시디자인 프로세스 'X-Information Modeling'에 대해 소개한 후 빅데이터를 가시화하여 건축주와 정부에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사례를 설명하였다. 빅데이터와 공간정보 분석 툴을 활용한 디자인 방식의 원리와 이러한 방식을 공공 분야에 활용할 수 있다는 새로운 정책적 접근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의미 깊은 자리가 되었다.

제3차 지식강연회에서는 최근 서울도시기본계획(서울플랜 2030)과 역사도심관리 기본계획 수립을 수행한 김기호 교수(서울시립대)가 '근대주의 도시계획의 반성'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맡아주었다. 지난 20년간 서울의 도시계획 패러다임 변화 모습을 살펴본 후 남산 제 모습 찾기, 조선총독부 건물 철거, 서울시청 광장 변화, 청계천 복원 등의 사례를 통하여 서울의 자연환경과 역사도심으로의 회복을 위한 그간의 노력들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 자리였다.

백혜인

auri - esri Korea, ArcGIS 세미나 개최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지난 5월 9일 esri Korea와 공동으로 웹 GIS 플랫폼의 이해와 활용 방안에 관한 세미나를 진행하였다.

‘현대 건축·도시 공간에서의 GIS 응용방안’을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GIS 관련 최신 기술에 대한 정보 습득과 기술적 이해도를 높이고, 구체적 사례를 통한 활용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esri Korea의 GIS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주제발표를 진행하였으며, 이후 참석자들의 질의응답이 이루어졌다.

첫 번째는 ‘웹 GIS 플랫폼 기반의 스마트 시티 구현방안’을 주제로, 웹 GIS 플랫폼 기반의 스마트 시티 구축방법과 로스앤젤레스·싱가포르 등 국내외 스마트 시티 구축 사례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두 번째는 ‘웹 GIS 플랫폼 개념과 Geo-Information Model’을 주제로, 웹 GIS 플랫폼의 개념과 웹 중심 플랫폼 변화에 따른 GIS 기능 변화를 설명하였다. 아울러 우리 연구소에서 구축하고 있는 건축문화자산 DB를 사례로, 건축자산 DB 구축 및 활용을 위한 새로운 접근방안을 예시 설명하였다.

세 번째 발표는 ‘아크GIS 플랫폼 앱’ 활용에 관한 내용으로, 모바일 시대의 등장에 따른 시민과 정부의 소통통로로서 GIS 앱의 역할과 기능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이 발표에서는 도로와 보행환경의 현황 파악(민원), 유지·보수와 모니터링 전 과정이 GIS 앱을 통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예시하였으며, 보행환경·도시재생사업·주민참여시스템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날 세미나에는 약 50명의 연구소 내 연구원들이 참석하였으며, 주제발표 후 연구소에서 수행하고 있는 주요 업무와 웹 GIS 플랫폼의 연계 및 공간데이터 활용에 관한 새로운 방향과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윤호선

학교시설 CPTED 적용방안 사례 세미나 개최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지난 5월 10일 오전 10시에 연구소 내 중회의실에서 ‘학교시설 CPTED 적용방안 사례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어린이나 청소년 대상의 각종 범죄와 학교폭력 등의 증가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학교시설과 사용자의 특성을 반영한 셉테드(CPTED)를 적용하기 위해 해외의 다양한 개선사례를 공유하고자 마련되었다.

주제발표에 앞서 손동필 연구위원(건축도시공간연구소)이 본 세미나의 목적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학교시설에 적용한 CPTED 전략과 사례’를 주제로 조진일 소장(한국교육개발원 교육시설 환경연구센터)의 주제발표가 진행되었다.

조 소장은 국내외 CPTED 가이드라인의 현황과 계획요소별 세부항목을 설명하고, 영국의 SBD(Secured by Design) 인증을 받은 여러 학교시설 사례를 소개하였다. 또한 기존 국내외 CPTED 가이드라인이 신설 학교시설에만 적용되는 한계점을 지적하고, 기존 학교시설에 적용 가능한 CPTED 평가모형에 대해 소개하였다.

이날 세미나에는 관련 전문가와 CPTED에 관심 있는 연구진 20여 명이 참석하여 학교시설의 CPTED 적용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실무적 정책적 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민지



건축도시공간 연구소 MOU 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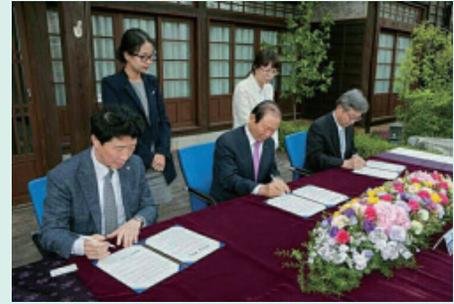
건축도시공간연구소- 한국건설관리학회 MOU 체결

건축도시공간연구소와 사단법인 한국건설관리학회는 지난 5월 3일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중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건축도시공간사업과 기술에 관한 정보교류 및 연구·조사, 그리고 건설 이미지 제고에 상호 협력하여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체결하였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건설산업의 선진화 사업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 개발, 건설산업의 과제 발굴 조사 및 대응, 건설산업의 홍보에 관련한 협력 및 정보 교류, 행사 기획·개최 등 관련 분야에서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앞으로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건축 및 건설 분야가 상호 융·복합하여 정책적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한국건설관리학회와 관련 분야 현안을 함께 발굴하고 지속적인 연구 교류를 해 나가기로 하였다.

백혜인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군산시-군산대학교 MOU 체결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지난 4월 28일 전라북도 군산시 고우당에서 군산시, 군산대학교와 지역 대학을 연계한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에서 세 기관은 지역 인재의 참여를 통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며 ▲ 도시재생사업 참여 프로그램 개발 지원 ▲ 참여 학생에 대한 역량강화 지원 등 관련 분야에서 업무 협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앞으로 ▲군산시는 학생들의 참여기회 제공, 인력채용 시가점 부여, 청년 창업 추진 시 창업 지원 ▲군산대학교는 도시재생 수강과목 신설, 수업 외 사업 참여 활동에 대한 학점 인정, 대학 자원 활용 조인, 재생사업 성과집 발간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도시재생 인력양성 교육 지원, 재생사업 성과집 발간 지원 및 홍보 등 역할을 맡아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박성남

**건축도시공간연구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MOU 체결**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6월 14일 정부세종청사 행복청 종합사업관리상황실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은 ▲행복도시 관련 사업에 관한 조사 연구 및 정책 개발 ▲행복도시 현안 과제 발굴 조사 대응 ▲정책 수립을 위한 정보 및 인력의 교류 협력 ▲건축물 특화를 위한 정책개발 정보 공유 ▲학술 토론회(심포지엄) 및 토론회(세미나) 등 전반적인 분야에서 상호 협력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는 공공건축·도시정책·한옥·범죄예방 4개 분야에 대해 7개 과제를 수행하게 되며, 대표 과제로 '국립박물관단지 및 한문화단지 사업 추진 협력', '행복도시 우수건축물에 대한 전산망(온라인) 주제(테마)지도 구축', '단독주택지 범죄 예방 방안 마련'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현안해결을 위한 수시 연구 과제를 진행하고, 국내 외 학술 토론회와 각종 공개토론회도 공동 개최하기로 하였다.

백혜인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세종시-세종경찰서 MOU 체결**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6월 22일 세종시청 집현실에서 세종시, 세종경찰서와 범죄예방환경설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범죄예방 환경조성 관련 정책 및 사업 추진 ▲지역역량 강화 및 주민참여 활성화 ▲범죄자로 및 관련 정보 공유 ▲범죄예방 환경조서 관련 연구 및 홍보 등에 있어 상호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하였다.

앞으로 세 기관은 범죄에 대한 시민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백혜인